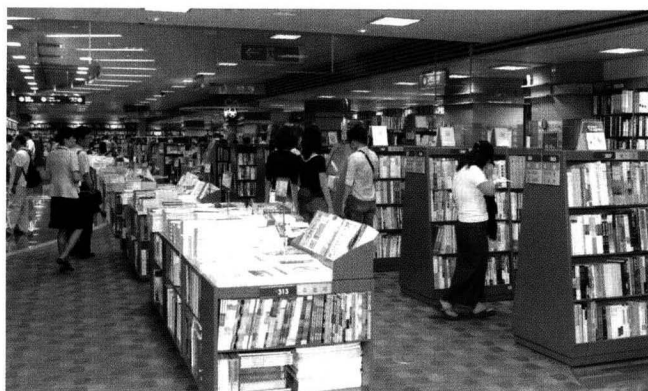


‘한국출판진흥위원회’ (가칭) 설립 움직임 수면 위로

‘출판및인쇄진흥법에 출판진흥 위한 법정기구 설치’ 추진
‘출판산업 발전 위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공적 기능 수행’



진흥위원회 설립은 창의적인 지식정보 시스템의 구축여부가 지식기반사회 발전의 관건이란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의 한 대형서점 매장 풍경.

출판문화산업의 총체적 진흥을 위한 법정기구인 가칭 ‘한국출판진흥위원회’ (이하 진흥위원회) 설치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간 출판계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지만, 2002년 8월 ‘출판및인쇄진흥법’ (이하 출판진흥법)이 제정될 당시 ‘도서정가제’ 문제 등에 밀려서 출판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집약해 내지 못했다.

지난 3월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 대표발의로 출판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을 계기로, 지난 5월 새 집행부를 구성한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도 진흥위원회 설립 논의를 재개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이번 기회에 출판산업 발전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는 진흥위원회를 법정기구로 설립한다는 취지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흥위원회 설립건을 추진하고 있는 출협 출판산업발전특별위원회 한철희 위원장(돌베개 대표)은 “출판문화산업의 총체적 진흥 임무를 수행하는 법정기구인 진흥위원회를 새 법에 반드시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출판활동 규제와 행정절차법 성격이 뚜렷했던 구법을 대체하며 제정된 현행 출판진흥법 역시 출판 진흥을 명목상으로만 열거하고 있을 뿐”이라며 “실질적인 진흥 주체(법정기구)가 부재하여 구체적인 법적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고 현행 법규의 한계를 지적했다. 오히려 출판물 심의·규제기관(청소년 유해 간행물 규제기구)만이 법정기구로 명시되어 ‘출판진흥’이란 법 제정 취지에 배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출판진흥 예산의 확보 방안이 분명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업 집행에 한계가 있어 왔다는 것이다.

출판정책 ‘공공성’ 강해, 통합적 정책 접근 필요

최근 출협이 발행한 진흥위원회 설립 추진 보고서에서도 이같은 취지가 잘 드러나 있다. 보고서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출판산업 진흥 기반 조성(과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출판유통 현대화, 전자출판산업 육성), 양서 출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출판산업 국제교류 확대, 출판및인쇄진흥법 제정 등은 전반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임에 분명하지만, 정책 시행상의 일관성과 공정성 결여 등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진흥책이 아닌, 파편화되고 단기적인 단체별 사업예산 지원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란 것이다.

진흥위원회 설립은 “지식기반 정보사회 발전의 관건은 창의적인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유통·이용 시스템의 구축 여부에 달려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문화·교육·학술 등의 지적 총화를 진화시키는 근간으로서 출판정책은 ‘공공정책’의 성격이 강하며, 통합적인 정책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출판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체들의 과당경쟁 체제에서 합리적인 산업구조를 정립하지 못한 채 디지털화와 글로벌화의 높은 파고와 맞서야 한다는 진단이다.

한 위원장은 “실질적인 출판 진흥을 위해서는 출판진흥법의 개정을 통한 법정 진흥기구의 설립과 예산 확보를 통해, 출판산업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 출판문화 저변 확대, 남북 출판교류 및 해외 진출 활성화, 학술도서 지원제도의 확대라는 출판계의 핵심 과제들을 실행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취재_ 김지희 기자